만만찮은 4월 보선 고민 깊은 새정치

최소 2곳은 이겨야 하는데 야권후보 난립 '변수'

광주 서을 패배땐 정국 주도·내년 총선 큰 타격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최소 두 석은 가져가야 체면 치례를 할 수 있지만 야권 후보 난립 등으로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면한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역학구도 변화 등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성남 중원, 관악 을, 광주 서 을 모두 야권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판세는 만만치 않다. 정의당은 이미 관악 을과 광주 서 을 후보를 확정했으며 성남 중원에서도 후보를 물색 중이다.

재야 진보세력의 신당 추진체인 국민모임도 오는 22일 창당준비위 출범에 앞서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도 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일 터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도 야권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 서 을도 천정배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천 전 의원이 정의당, 국민모임 등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새정치연합에 맞서는 단일 후보로 나선다면 광주 서 을의 결과는 투표함을 개봉하기 전에는 누구의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리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그 파장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호남 물갈이'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4일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조 사무총장은 최근 "정치는 생물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야권연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전대에서 문 대표와 격돌했던 박지원 의원도 "구 통합진보당과는 아니지만 다른 야권과는 연합 및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이 아니라 후보 간의 연대 및 단일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연대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다. 우선 옛 통진당과의 연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가장 유력한 연대 대상인 정의당도 새정치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고 비판하는 국민모임과 사실상 공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모임 측을 설득하지 않고는 연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알아볼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특히, 광주 서 을 보선 결과는 호남 민심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옛 통합진보당에서는 광주 서구을 보선에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을 후보로 내세운다. 조 전 본부장은 9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사거리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영입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생행보 '무난' 평가…4월 보선이 '시험대'

■ 취임 한달 맞은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문 대표는 지난 한 달 '유능한 경제정당', '소통과 통합', '당의 단결'을 모토로 적극적 행보를 했다. 문 대표는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대 행보를 통해 단순한 비판·견제세력의 역할을 넘어 유능함과 실력으로 승부, 정권탈환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면모를 일신하고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당선 다음날 연말정산을 주제로 한 샐러리맨과의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불안한 삶이 상징인 50대와의 대화를 이어갔고, 전월세 문제에 시달리는 가정과 소통하며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안으로는 '탕평인사' 등을 내세워 전당대회 후유증을 추스르며 내부 화합을 도모했다. 물론 일부 당직 인선과 관련, 계파 갈등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문 대표가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덕분에 존재감 없던 당 지지율은 모처럼 상승했고, 문 대표 개인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그림자'가 없던 건 아니다. 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놓고 지도부 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여진이 일었고, 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에서 꺼내든 여론조사 카드로 후폭풍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지난 한 달에 대해 정치권에선 대체로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의 갈 길은 아직 멀다. 당장 4·29 보궐 선거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야권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원심력이 커질 공산이 적지 않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 2일까지 처리"

당정청 재확인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5월2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했다.

당정청은 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jkpark@

이용섭 전 국회의원 귀국

中 연수 마쳐…"보선 불출마"

이용섭(한반도미래연구원장) 전 국회의원이 3개월간의 중국 연수를 마치고 오는 11일 귀국한다고 한반도미래연구원측이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의 귀국으로 오는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이 전 의원 측은 "4·29 보궐선거에는 출마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국 사회과학원 초청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에서 강연과 연구활동 등을 해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직후보자별 의혹·쟁점과 해명

후보자(청문회 개최일)	의혹·쟁점	반론·해명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9일)	20대 총선 출마 여부	총선출마 여부보다 업무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과거 해수부 폐지 관련	여당 의원으로서 전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서명에 참여한 것, 폐지 논란 당시 MB정부 인수위에 반대 의견서 전달했음
	투기성 위장 전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경기도로 일시적인 주소 이전을 했던 사실 시인, 유감 표명
	증여세 미납	매월 자녀에 대한 '보험료' 지급하고 있는 것, 2020년이 환급받는 만기일이므로 아직 증여세를 낼 시점이 아님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통한 고수익	금액이 과장된 것, 배당금 일절 받지 않았으며 겸직시 일부 월급을 받은 것은 사실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9일)	20대 총선 출마 여부	입장 표명 유보
	전문성 부족	30여년간 경제.재정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이 현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라는 국토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보은인사' 논란	장관 인사가 중요한 국사 중 하나이므로 보은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자녀 위장전입	자녀의 통학거리 때문이었다며 시인, 유감 표명
	정무위 활동기간 배우자의 기부금 수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한 적 없음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법무사에 일임해 당시 관행대로 신고, 이유를 떠나 매매 처리과정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힘
홍용표 통일부 장관 (11일)	이념 편향성	뉴라이트 싱크넷에 발기인으로 등재는 됐으나 활동은 하지 않았음. 지금까지 특정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있는 시각 갖추려 노력해옴
	논문 표절	언급된 논문들은 주제와 목적, 연구방향이 다른 논문들임. 다만 인용 및 자기출처 등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고 인정
	증여세 탈루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 세법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시인, 유감 표명
	다운계약서 작성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 확인되는대로 소명 예정
	부인 위장전입	과거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고 시인, 사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10일)	업무 이해상충으로 인한 직위 적정성	금융 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 표명
	위장전입	주택청약 때문이었다며 시인, 유감 표명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가액을 제대로 몰랐다고 시인, 사과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퍼레이드

오늘부터 장관·국정원장·특별감찰관 등 8명

與 "정책 검증" vs 野 "재산·병역 의혹 추궁"

국회가 9일부터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레이스에 돌입,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유기준·유일호 후보자에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10일), 홍용표 통일부(11일)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만 4명에,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11일) 후보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16일) 후보자까지 이어진다.

게다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합치면 이달 중 8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비전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당은 재산형성 과정과 병역 등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조준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일정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후보자를 낙인 찍으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장관급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붕괴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